

# 난방 끄고 간식비 줄이고...복지시설 고물가 버티기

### 광주·전남 아동시설 등 연말 온정 손길 코로나때보다 더 줄어 지자체 보조금 물가 반영 안되고 기부문화 위축에 운영 '허덕'

고물가·고물가가 장기화하면서 광주·전남 복지시설이 험겨운 겨울나기를 하고 있다. 성탄 온정이 뜰 끊겼고 혹독했던 코로나 시기보다 후원이 더 감소해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내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은 10곳이며, 420여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종 협회 등 온정을 전하는 후원자들이 몰려들지만, 올해는 예년과 다르다는 것이 양육시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시설운영을 지탱해준 후원이 줄자 광주지역 아동시설들은 간식을 줄이고 난방을 덜 때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광주시 남구 송하동의 신애원 관계자는 "코로나 19때도 후원금이 줄어들어 힘들었는데, 그 때보다 훨씬 더 줄어 시설 유지를 걱정해야할 정도"라며

"가장 부담이 큰 건 식비다. 물가가 한없이 올라 1식 2700원 기준을 맞추느라 간식을 줄이고 있다. 예전과 달리 후원자들에게 쌀을 보내달라는 요청까지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광주에서 지원되는 난방비 등 고정 지원금은 변화가 없는데, 물가는 물론 전기료와 가스요금도 오르니 운영난이 가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구 동립동 보육시설인 애육원 관계자 또한 "코로나 때에 비하면 후원금은 조금 늘고 방문자도 늘었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넉넉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애육원 관계자는 "후원금만으로는 빠듯해 시 지원금을 받아서 난방비 등 운영비, 간식 구입비, 생필품 구입비 등을 충당하려 애쓰고 있다"며 "난방가동을 줄이고 절약하면서 겨우 버티고 있다. 후원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후원이 늘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나눔의 손길이 줄어들어는 곳은 아동시설뿐 아니라 다른 복지시설도 비슷했다. 겨울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 대상 복지시설의 경우 식사와 난방비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줄어든 후원금에 난방비나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다. 신성화 광주시 서구종합노인복지관 관장은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은 고정돼있고 물가는 계속 오르다 보니 당장 어르신들 밀반찬 준비하는 것도 어찌해야 할지 우려가 크다"며 "코로나19 이후로도 정기 후원금은 크게 늘고 있어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 어르신들의 사연을 발굴해 네이버 해피빈 등에 올리는 등 온라인 모금 창구를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차상위계층·독거노인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하는 남구의 '분도와안나 사랑의식당'도 부족한 후원금으로 식재료를 마련하느라 애를 쓴고 있다. 김광엽 '분도와안나 사랑의식당' 사무국장은 "코로나19 이후로 현재까지 후원금이 20% 줄었는데,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물가가 많이 올라 후원금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러 식재료 매장을 이 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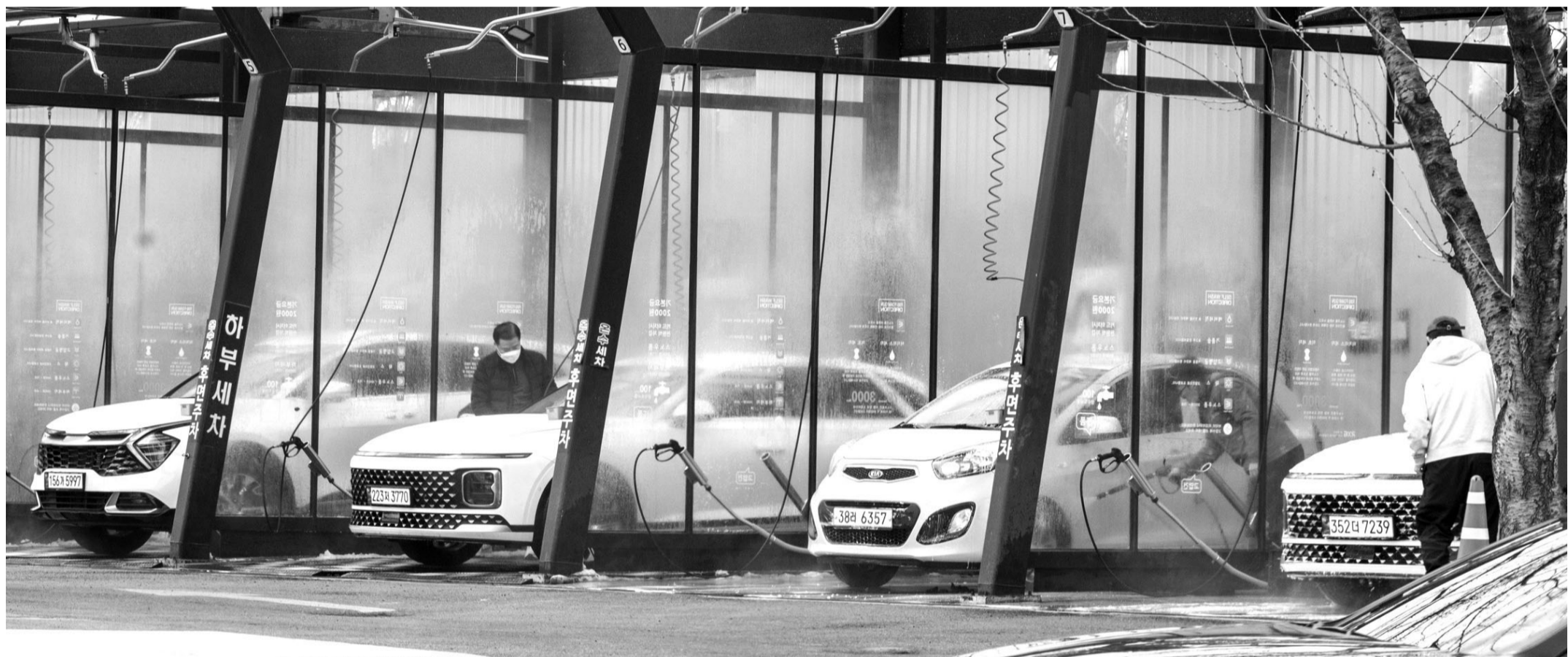
듯 뒤져서 조금이라도 더 싸고 좋은 식재료를 구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시설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설명한다. 고물가·고물가의 장기화로 기부의 온정이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아서다. 2년마다 통계청에서 집계하고 있는 '기부 여부 및 기부하지 않은 이유' 현황에 따르면 올해 기준 광주에서 지난 1년동안 '기부한 적 없다'는 사람의 비중은 76.1%, 전남은 76.2%에 달했다. '기부한 적 없다'라는 응답자는 광주에서 지난 2013년 60.6%였으나 2015년 69.9%, 2017년 70.4%, 2019년 71.4%, 2021년 76.3%, 2023년 76.1%로 매년 증가했다. 전남 또한 2013년 66.0%였지만 올해 76.2%로 증가했다. 기부하지 않은 이유로는 광주의 경우 '기부에 관심이 없다' 43.4%, '경제적 여유가 없다' 41.0%, '기부 단계를 신뢰할 수 없다' 7.9% 등을 꼽았다. 전남에서도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응답이 42.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조폭 탈퇴 안했다면 교도소 조폭 특별관리는 정당

조직폭력배 활동 전력이 있는 수용자가 금융범죄로 수감됐어도 교도소가 조폭으로 특별관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A씨가 광주교도소를 상대로 제기한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2022년 11월 징역 2년 6월의 형을 확정받고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지난 7월 A씨는 광주교도소에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교도소 측은 '구속영장에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명시돼 있다'며 거부했다. A씨는 "체포영장, 공소장, 판결문에는 조직폭력배로 명시돼 있지 않고 과거 가담전력만 가지고 지정대상으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직폭력 범죄로 수용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경찰이 조직폭력배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로 등록·관리 하고 있으며, A씨가 폭력조직에서 탈퇴했거나 활동하지 않고 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면 범죄 실행 당시에도 폭력조직에 가담 중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수형자의 교정 교화를 위한 생활 관리, 안전과 질서 유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 하는 교정현실을 고려하면 A씨에 대한 지정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축제주관사 청탁 금품 전직 광주시장 운전기사 항소심서 감형 집행유예

공직자 신분을 활용해 금품을 받은 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평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시장 운전기사(별정직 7급) A(43)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같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4500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A씨는 행사대행 업체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지난 2018년 광주 세계김치축제 주관대행사 용역수수 대가로 현금, 리스 승용차 등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용섭 전 광주시장 캠프에서 선거 운동을 돕다 이 시장이 당선된 뒤 운전기사로 채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수수한 현금 1600여만원과 차량이용료 3000여만원을 전액반환했고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5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한 점을 두루 고려했다"고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눈 온 뒤 셀프세차 행렬 25일 오전 광주 광산구의 한 셀프세차장을 찾은 시민들이 며칠동안 내린 눈으로 더러워진 차량을 세차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광주 지산1구역 재개발 '지분 쪼개기' 투기 의혹 항소심서도 무죄

아파트 분양권 확보를 위해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한 혐의를 받는 광주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소유주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평호)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6)씨 등 지주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를 유지했다고 25

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5월 광주시 동구 지산1구역 재개발사업 예정지 내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된 원룸을 사들인 뒤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해 아파트 분양권을 얻으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중 A씨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의 조합장으로 애초 검찰은 '지

분 쪼개기'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한 것으로 봤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등에서 더 유리하지만, 소유자가 1명이어서 재개발 시 분양권을 1개만 받을 수 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해 세대별로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일반적인 명의신탁과 달리 부모·

자식 관계에서 자녀들에게 원룸 또는 매수대금을 증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자녀들이 매수대금의 절반 또는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점, 세금을 부담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 상담문의: 062-449-4446